

특별기고

12월 한일 정부 합의와 위안부 문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지난 해 12월, 한국과 일본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극적으로’ 타결된 이 합의는 그 후 양국 사회에서 국내용 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일본공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전개 과정과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를 위안부 문제 전문가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의 글을 통해 재검토하고자 한다.

1. 영화 '태양이 필요해'에 대한 감상

영화 '태양이 필요해'는 일본에 거주 중인 중국인 한추기(班忠義)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한추기 감독은 1995년에 산시성 위현(山西省 孟縣)의 피해자 완아이화(万愛花) 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그녀들을 도와왔다. 그리고 20년에 걸쳐 그녀들의 삶과 운동을 영상으로 기록했고 2016년에 그 영상을 가감 없이 2시간 30분의 대작으로 만들어냈다.

영화는 산시성 위현 양quan촌(羊泉村)의 초등학교 교사 장쌍빙(張双兵) 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보살피는 장면들로 시작된다. 장 씨의 활동은 중국 당국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

이 영화에는 두 종류의 피해자가 등장한다. 중심은 위현의 완아이화 씨를 대표로 하는 피해자들로, 일본군이 다싱(大行)산맥의 공산당 지역을 점령하면서 마을 여성들을 납치하고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강간한 끝에 생겨난 피해자들이다. 본인들도 위안부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른바 도시의 위안소에서 위안부가 된 사람들과는 다르다. 필리핀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사라 蘇, 한국명 소정희(蘇貞姬))는 '범죄적' 위안소 혹은 '준(準)위안소'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군 병사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과 학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것이었다. 도시에 있는 군주둔지의 위안부가 된 사람도 영화에 등장한다. 우한(武漢) 위안소의 위안 주린(袁竹林) 씨다. 감독은 중국에서 일본군에 의한 피해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통쯩(童增) 씨의 소개로 위안 주린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 이 두 부류의 피해자들이 문제를 고발해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 당국이 고발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영화는 집회에 끼어드는 공안의 모습도 담고 있다. 완아이화 씨는 공산당의 부총장도 맡았었고 고문도 당했던 인물로,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손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의 편견과 물이해이다. 위안 주린 씨가 도쿄의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증언한 것이 신문에 보도되자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된 것도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다. 일본군의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에서 소송을 한 위안부는 위현에서 제1차(4명), 제2차(2명), 제3차(완아이화 씨 등 10명), 하이난섬의 8명뿐으로, 압도적으로 위현의 준위안소 피해자들이 많다. 참고로 필리핀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은 211명은 모두 준위안소의 피해자들이다.

영화는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피해자들이 1913년까지 모두 사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아이화 씨는 죽기 직전에 “사죄하기를 바란다. 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 배상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도 귀신이 되어 싸울 겁니다. 진리를 밝혀야 합니다. 일본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 영화를 보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꼈다. 일본이라는 국가와 국민들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사죄의 말 한마디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충분하지 않으나 일본 정부는 사죄도 했고 속죄의 노력도 해 왔다.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았다. 아시아여성기금이 중국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2006년 5월 해산 직전의 아시아여성기금에 산시성 피해자 소송 변호사인 오모리 노리코(大森典子),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씨가 방문했다.

두 사람은 이대로 패소하기보다는 아시아여성기금의 협력을 얻어 대법원에서 '화해협약'을 요구하는 상신서(上申書)를 제출하고 싶다고 했다. 이들도 국가 보상을 요구해 온 변호사들로 아시아여성 기금과는 반대파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화해라는 형태를 얻어낼 수 있다면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나는 전무이사의 입장으로, “대법원으로부터 화해를 위한 협력 요청을 받게 된다면 외무성과 협의하면서 기금으로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총리의 ‘사죄 편지’를 발표할 수도 있고 네덜란드에 실시한 방식처럼 의료복지지원 300만 엔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모리 변호사는 절차를 진행시켰고 대법원은 정부 측에 이 건을 타진했다. 그러나 타진을 받은 법무성은 ‘대법원에서 승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째서 화해를 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외무성에도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결국 정부 측의 거부로 화해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중국인 원고 소송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아시아여성기금에 직접 신청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무리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중국의 피해자에 대해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끝이 났다. 일본(국가)의 재판방위(裁判防衛) 방침에 패했지만 일본은 또 다른 얼굴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재판에서 졌다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운동단체의 방침에도 문제가 있었던 탓이라고 생각한다.

2.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25년간의 운동

제1차 라운드는 1990년 한국 여성단체가 위안부 문제 6항목 요구를 제기한 데서 시작되었다.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출범한 것이다. 결정적이었던 것이 1991년 김학순(金學順) 할머니의 커밍아웃(첫 위안부 증언), 기자회견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노태우 정권의 촉구를 받아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고노(河野)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해 위안부 인식을 확립하고 사죄했다. 그리고 사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무라야마(村山) 자사(自社)연립정권이 1995년에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atonement, 속죄 sokje)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보상금에 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없고 민간 모금만으로 충당한다는 기금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한국의 피해자 대부분과 운동단체, 일본의 운동단체가 반대하며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의 중지, 구상 철회를 요구했다. 정대협은 책임자 처벌 등을 추가한 7항목 요구를 내걸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아시아여성기금은 필리핀 211명, 네덜란드 79명에게는 속죄(atonement)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한국과 대만에서는 각각 60명, 13명으로 등록 피해자의 3분의 1 정도에게만 배상하는 것으로 사업이 종료됐다.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기금은 사업을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정부 자금에 의한 의료복지지원도 사업 내용에 포함시켰고 한국과 대만에서는 이것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되었기 때문에, 속죄사업의 내용은 정부로부터 300만 엔, 국민모금에서 200만 엔을 합해, 총 500만 엔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전원에게 200만 엔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한국, 대만, 필리핀만 하더라도 모금액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으며 결국 정부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사업 시작 때 알고 있었다. 그렇게 기본 개념은 무너졌고, 이를 수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

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결국 2007년에 기금은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했다.

제2차 라운드는 2009년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실 제1차 라운드에서 일본의 운동단체 중 아시아여성기금을 반대하는 곳에서 입법 해결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의원들은 2000년부터 참의원에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 왔다. 정부가 사죄를 하고, “명예 등의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법안이다. 한일조약 시 협정에 의거하여 국가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참의원 법제국이 고수했기 때문에 결국 도의적인 책임 선에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정대협은 법적 책임론을 고집하고 있었으나 일본의 운동단체가 지지한다는 점과 법률에 의거한 지급이라는 점에서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2년에 위원회 심의가 2번 이루어졌을 뿐, 줄곧 심의와 폐안의 운명을 반복했다.

법안 제출의 중심에 있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됨으로써, 일본의 운동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2010’을 조직하여 입법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안 제출자는 장관으로 입각했으나 입법을 위해서는 힘쓰지 못하였고, 결국 입법 해결은 불가능해졌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아 정대협은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했다. 며칠 후 한일 정상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강경한 뜻을 피력했다. 노다 총리는 “지혜를 내겠다”고만 겨우 대답했다. 이 사태를 보고, 2012년 2월 ‘전국행동 2010’ 하나부사 도시오(花房俊雄) 공동대표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치결단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며, ① 피해

자의 마음을 울리는 사죄, ② 정부 자금을 의한 '보상금' 지급, ③ 인도적 지원이라는 생각의 철회라는³ 항목을 제안했다. 이 안이 사이트 쓰요시 관방부장관에게 전달되었으며 12월 28일에 대통령 특사인 이동관 대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안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①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발표한다. ② 총리의 새로운 사죄문에서 “도의적”라는 말을 쓰지 않고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표현한다, ③ 주한 일본 대사가 총리의 사죄문과 국비로 조성한 사죄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한다, ④ 제3차 한일 역사 공동 연구위원회를 출범하고 조직 내에 위안부 문제 소위원회를 설치, 한일 공동으로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에 노력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합의안에 승인했으나 노다 총리가 거부하면서 합의안은 소멸되었다.

제3차 라운드는 2012년 말 아베 신조 2차 정권이 탄생한 후의 일이다. 역사수정주의자 아베는 총재 선거에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토를 주장하여 승리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직후부터 그 방침을 분명히 드러냈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이 방침에 대해 미국은 처음부터 냉철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아베 총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한다며 압력을 가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중상 주간지 캠페인을 조직해 한일 관계는 극도로 험악해졌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개입하여 2014년 3월 14일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를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에 즈음하여 6월 제 12 회 아시아연대회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채택했는데 이는 일본 전국행동과 한국 정대협이 공동 제안에 기초한 것이었다. ① 고노담화의 계승 발전에 근거한 해결, ②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죄, 가해 사실의 승인(군 위안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성노예가 된

것 등) ③ 반복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과를 표명할 것, ④ 사죄의 증표로서의 배상 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합의해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제안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결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로부터 획득하기를 바란다는 안이다. 그러나 법적 책임, 법적 사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말은 이 제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사죄의 증표로서의 배상'이라는 것은 정부 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 획기적인 제안을 낸 후에 운동단체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2014년 11월에 도쿄와 오사카에서 집회가 있었지만, 도쿄 집회에서 이 제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필자 와다는 이 제안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부터 이 제안의 홍보를 자청하여 나서게 되었고 외무성, 한국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자 강연도 하고, 논문과 책에도 썼다. 2015년 4월 아베의 방미 전날 도쿄에서 전국행동의 집회가 있어서 나는 윤미향(尹美香) 씨와 함께 연단에 올라 이 제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위안부 동원에 인신매매가 이뤄졌다고 발언했다. 그 후부터 한국 측과의 비밀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같은 해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에 합의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때 나는 아베 총리의 사죄 편지의 문구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표현되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어떤 표현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논의해야만 한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시아연대회의의 제안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하지 않은 것도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12월 23일에 정대협을 방문하여 윤미향 씨에게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아베 총리의 사죄문을 보여 주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들려 달라고 부탁했다.

“과거 전쟁 시절에 일본군 위안소에 많은 여성들이 소집되어 장병에 대한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

처를 입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 내각 총리대신으로 이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올립니다.”

윤미향 씨는 내가 제시한 안에 대해 ‘짧다, 4 항목은 들어가 있느냐, 12년에 제안한 것보다 후퇴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할머니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을 표출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 새해 메시지를 준비 중이니 함께 생각해보자’고 했다. 윤미향 씨는 ‘해결은 될 거다, 2월 중에 해결되면 괜찮다’고 보고 있었다. 우리는 아베 총리를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12월 28일 기습 공격적으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어쨌든 12월 합의는 위안부 문제 운동의 25년 과정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정치 결착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서 만들어진 합의라고 할 수 있다.

3 외교장관회담의 합의 내용과 평가

1) 일본 정부의 사죄

형식적에 있어서 기시다 외무장관이 회담에서 합의하고, 회담에서의 합의를 통해 회담 후에 발표한 말로 표명되었다. 이는 문서화 되지 않았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2종류의 문장으로 발표되었다.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 기자회견은 다음과 같다.

“기시다 외무장관

(1) 위안부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 다시금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과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문장은 고노담화, 무라야마 인사, 하시모토의 편지를 반복한 것으로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말을 ‘책임’으로 바꾼 점이 다를 뿐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을 부정하지 않고 계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추가 요망사항과 관련해서는 아시아연대회의 안, 아시아여성기금이 요구한 사실 확인(군위안소에서 위안부가 될 것을 강요당했다)을 문장으로 넣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사이트 관방부장관 안, 아시아연대회의 안에 있었던 ‘책임’의 인정만을 포함시켰다. 하시모토의 편지에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 “올바로 후세에 전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아베 총리의 말에 이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고노담화, 아시아여성기금을 계승할 것을 확인함으로써 오히려 아베적 수정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것은 아시아연대회의 안의 사실 확인이 거절당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23 일 안(案)에 아시아여성기금의 위안부에 대한 정의를 넣었다. 이번 아베 총리의 사죄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이는 아베의 사죄의 전제가 되었을 것이다.

아베 총리의 사죄가 일단 표명되었으면, 뚜렷한 증서로 남겨 둘 것을 요구해야 한다.

2) 10억엔에 대하여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위안부 분들의 마음

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자주 이용해온 ‘인도적인 조치’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아시아여성기금에서 사용되어 온 ‘보상’의 조치, 영어로 atonement(‘속죄’) 조치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0억 엔을 각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제2항의 조치가 제1항의 사죄를 전제로 한 조치임이 분명한 이상, 10억 엔은 ‘사죄의 증표’로 일본 정부가 내놓는 것이라는 설명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억 엔이 우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실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일본 총리의 사죄 편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은 한국, 대만의 피해자에게는 500만 엔(정부 자금 300만 엔, 국민 모금 200만 엔), 필리핀의 피해자에게는 320만 엔(정부 자금 120만 엔, 국민 모금 200만 엔), 네덜란드의 피해자에게는 300만 엔(정부 자금으로)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면, 300만 엔에서 500만 엔 사이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균형을 보더라도 바람직하다. 물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사죄의 증표를 표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10억 엔이라는 금액은 많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 외에 ‘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확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자금을 지원해 위안부 문제 역사기념관을 만들고, 한국 정부, 한국 학계, 운동단체가 총력을 기울여 일본 및 세계의 뜻있는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 전시를 완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3)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것

기시다 외무장관의 발표에는 “이번 발표로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

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자제한다.” 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말을 아베 총리는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한국으로부터 어떠한 요구를 받더라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의 경과로 보면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 아시아여성기금에서 표방해온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고, 부정하지는 않겠다는 서약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더욱더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내용으로서의 아베 총리의 사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비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며, 아울러 이번의 해결 내용을 국제 사회에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2월 16일에 제네바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심의관이 일본 대표단의 모두 성명 중에 “오랫동안 한일 양국 간 현안 사항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해 말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이 문제는 양국 간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보고한 것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행동이었다.

한국의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단체들로서는 이번 한일합의로 이 정도의 결과 밖에 얻지 못하였으나 아베 수상의 사죄편지를 받게 된다면 이를 활용하고 한국의 피해자들을 위해 10억엔 의 자금을 각출하여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다른 국가의 피해자들 역시 일본정부로부터 배상금 지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북한,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의 운동단체와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日本空間)

부록 : 총리의 사죄 편지에 관한 자료

■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결론 부분)

결국,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른바 중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 1995년 8월 15일 아시아여성기금 발족 시 무라야마(村山) 총리 인사(부분)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구 일본군이 관여하여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주었으며, 도저히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중군위안부로서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1996년 총리의 사죄 편지 · 기금 운영 심의회에서 제안된 와다(和田) 발기인 案

저는 일본 총리로서 과거 '중군위안부'가 되어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신 여러분께 사죄의 편지를 보냅니다.

과거 전쟁 시절에 일본군은 전선이 형성되는 곳, 중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남아 각지에 다수의 군위안소를 설치하고 그곳에 많은 여성을 소집해 장병들의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16, 7세의 소녀도 포함되는 어린 여성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될 줄도 모른 채 이끌려온 사람들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일은 참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큰 죄였습니다.

이에 여러분께 가해진 죄에 대한 일본의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여러분은 전시 중에 이러한 처지에 놓여져, 청춘을 짓밟히고 크나큰 고통을 겪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전후에도 50년의 긴 세월을 걸쳐 상처받은 몸과 잔혹한 기억을 안은 채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내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일본이 전후(戰後) 이토록 오랫동안 여러분께 행한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사죄의 뜻을 담아 국민으로서의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국민과 함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창설하고 그 기금 마련을 위해 각출해 왔습니다. 사죄의 말이나 금전적인 지불로 여러분 생애의 고통이 보상될 것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부디 정부와 국민의 결의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과 함께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다수의 국민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이 여러분께 가한 죄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경험하신 고통을 어느 누구도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나서 주셔서 저희들이 과거에 대하여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용기를 일본 국민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간이라도 편안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1996년 8월 14일 아시아여성기금 사업 실시 시, 하시모토(橋本) 총리의 사죄 편지

금번,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을 통해 중군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일본의 국민적인 보상이 실현됨에 있어서, 저의 마음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 다시금,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올립니다.

우리는 과거의 무게로부터도 미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올바르게 후세에 전하는 동시에, 이유 없는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편안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12년 10월 민주당 사이트 쓰요시(齋藤勁) 관방부장관과 이동관(李東官) 특사가 검토한 案 A

지난해 8월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 후, 위안부분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노력을 추구하는 요구가 여러 번 제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관방장관 담화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한국의 위안부 분들에게 대하여 일본 정부의 사죄의 뜻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쟁 시절에 군의 요청에 따라 군의 관여 하에 위안소에 많은 여성들이 소집되어 일본군 장병에 대한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여성들이 그곳에서 경험한 비인간적인 대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은 고통과 상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 다시금 이른바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

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올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올바른 인식을 후세에 전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분들이 저희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도록 촉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일본 정부는 위안부 분들에게 사죄의 뜻을 나타내는 표시로 돈(사죄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이 보상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부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의 위안부 분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2015년 12월 23일 한국전문가회의·정대협(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에 제시한 와다 案·서울

과거 전쟁 시절에 일본군 위안소에 많은 여성들이 소집되어 장병에 대한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 이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올립니다.

■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후 기시다(岸田) 외무장관 기자회견 발표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 다시금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 2015년 12월 28일 발표되었어야 할 아베(安倍) 총리의 사죄 편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나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 다시금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安倍晋三)

번역: 강은정(번역가)